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놓고 서적·장류 등 경합

중기부, 내달 첫 지정 예고
동반위, 18개 업종 접수해
9개 업종 중기부에 추천
심의위 열어 결정후 고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내달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임에 따라 어떤 업종·품목이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합동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속하게 심의해 10월 중 지정·고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추천을 요청하면 동반위가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추천한다. 이를 받은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종의 영세성,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하고 중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정기간이 5년으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3년)보다 길고, 제도를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선 매출액 5%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기 적합업종에 비해 더욱 강화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업종·품목 현황〉

순번	업종품목별
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2	중고자동차판매업
3	자동판매기운영업
4	제과점업
5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6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7	장류·간장
8	장류·고추장
9	장류·된장
10	장류·청국장
11	자동차전문수리업
12	앙금류
13	어묵
14	두부
15	전통떡
16	햄버거빵
17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18	기타 인쇄물

/자료=동반위

이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한계를 느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고대하고 있다.

16일 중기부와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을 위해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위에 신청한 업종(품목)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장류 간장·고추장·된장·고추장·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전통떡, 햄버거빵,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인쇄물 등 총 1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동반위가 중기부에 추천해 첫 단계를 통과한 품목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두부 등 9개다.

이들 9개 업종을 신청한 관련 단체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적),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자판기), 한국화원협회(화초),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가정용가스연료),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두부), 한국장류협동조합(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0월에 몇 개의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면서 "관련 자료 등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심의 날짜를 여러개 잡아 하루에 1~2개 품목씩 논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첫 지정이 임박하면서 신청 단체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 같은 해 12월 본격 시행된 이후 동반위에 관련 지정을 처음 신청한 '1호 품목'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이다. 신청단체인 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서적이 중기 적합업종(확장 자제)으로 지정된 지난 6년 동안에도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는 매장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서 대형서점이란 연매출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2017년 말 현재 매출 50억 미만 중소형 서점은 전국에 2031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점조합연합회 성미희 실장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에도 대형서점의 숫자가 배 이상 늘고, 중소형 서점은 크게 줄어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형서점의 숫자를 지금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장류협동조합은 고추장 등 장류 4개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조합에는 CJ, 대상, 사조, 샘표 등 대기업들도 속해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 장류조합은 장류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이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신뢰가 쌓인다면 적합업종 반납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류조합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저가제품 시장서 철수, 과다 판촉 자제, 정부조달시장 진입 자제 등을 약속했던 대기업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대기업은 가정용 소포장과 고가 및 고급품, 해외시장을, 중소기업은 업소용 저가 및 대물시장, 조달시장에서 각각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백년가게 54곳 추가선정… 전국 총 210곳

중기부-소진공
진주 하동집·인천 남창문구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들어 3번째로 백년가게 54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년가게는 현재까지 총 210곳으로 늘어났다.

백년가게는 지난해 8월 먼지막 순대국집(서울 대림동)을 1호점으로 첫 발을 내딛였다.

이번에 백년가게 명단에 새로 오른 곳은 경남 진주 하동집(업력 53년), 경기 양주 덕화원(〃 47년), 충남 논산 황산옥(〃 47년), 부산 사상 낙원각(〃 45년), 경기 안양 봉암식당(〃 43년), 서울 동대문 성천막국수(〃 38년), 전남 강진 해태식당(〃 38년) 등 음식점과 인천 부평 남창문구사(〃 54년), 충남 서산 삼보식육점(〃 47년), 강원 평창 대흥상회(〃 46년), 광주 서구 강전사(〃 44년) 등 도소매업들이다.

진주 하동집은 가업 승계 이후 한우물을 파고 있는 지역의 유명 복·아구요리 전문점으로, 3대에 걸쳐 내려오는 단골손님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관광 방문객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중화요리 전문점인 양주 덕화원은 3대를 이어 경영하고 있으며,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논산 황산옥은 복어, 우어, 메기 요기를 전문으로 한다. 강경포구에서 메기매운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대에 걸쳐 내려오는 '황금복어탕'으로 맑고 개운한 맛으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 남창문구사는 문구류를 취급하는 도소매업체로 전 대표는 6.25 전쟁 중에 공책과 연필을 갖고 다니며 가게를 키웠다.

47년 업력을 갖고 있는 서산 삼보식육점은 서산시에서 드물게 지방암돼지와 한우를 취급하며 특히 소내장 전문으로 차별성을 갖고 모든 거래처와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신망이 두텁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5월 당시 지난해 선정된 백년가게 81곳을 대상으로 매출, 고객 증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2.5%가 매출과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 선정된 210곳의 백년가게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충북이 11%로 가장 많고, 서울 10.5%, 전북 9%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71.4%, 도소매업이 28.6%였다.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백년이상 생존·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혁신역량강화 교육기회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우대(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우대(0.4%p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승호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식에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사이트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中企 복지향상 마중물… '복지 플랫폼' 출범

중기부-대한상의
80만개 서비스 임직원에 할인
가입비·이용료 없이 무료 혜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시발점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할인된 가격의 여행·취미·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투자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함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상공회의소 내에 중소기업 복지센터도 설치한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오픈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및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최병환 CJ CGV 대표, 박윤택 SK 엠앤서비스 대표,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 신동훈 교원웰스 사장 등 복지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에 총 19개 기업이 복지상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하나투어, CJ CGV, 시원스쿨, 교원웰스, 대명리조트 등 19개 복지플랫폼 제휴기업이 여행상품, 경조사, 어학, 자기개발 등 80만 개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대한상의 회원사 중 중소기업 1000여 개 기업이 복지플랫폼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임직원과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내 복지담당자가 복지서비스 플랫폼 회원으로 가입하면 직원 수대로 복지플랫폼 아이디를 받아 사용한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을 위해 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혼자서는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상의와 복지플랫폼을 오픈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복지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 공식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 사항인데도 정부가 통계나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도 지난달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면서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지난달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또 대상의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각각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